nabo Fiscal Trends & Issues

재정동향 & 이슈

2017년 여름 통권 제2호

02 주요 재정지표

06 재정입법 동향

12 주요 재정이슈

36 외국의 재정동향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주요 재정지표

· 총수입·총지출
· 재정수지
· 국가채무

총수입 · 총지출

2017년도 5월까지 총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16.2조원 증가한 196.0조원으로 진도율은 47.3%이며 전년동기 대비 2.5%p 상승

○ 전년동기 대비 진도율 상승은 주로 국세수입과 기금수입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국세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11.2조원, 기금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3.1조원 증가

– 국세수입의 증가는 주로 법인세(전년대비 4.3조원) 증가와 부가세 증가(전년대비 2.5조원)에 기인하며, 기금수입의 증가는 주로 사회보장기여금 증가(전년대비 1.8조원)에 따름

국세수입 · 기금수입 증가로 5월까지 총수입 전년동기 대비 16.2조원 증가

2017년도 5월까지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9.4조원 증가한 184.8조원으로 진도율은 46.1%이며 전년동기 대비 2.1%p 상승

○ 전년동기 대비 진도율의 상승은 주로 일반회계 지출 증가와 세입세출외 지출 증가에 따른 것으로, 전년동기 대비 일반회계 지출은 2.7조원, 세입세출외 지출은 3.75조원 증가함

– 프로그램별 진도율은 자동차및교통정책(97.0%), 노인의료보장(89.2%) 등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지방도구조개선(수시배정사업 지정) 등에서는 5월까지 집행실적이 없음

2016/2017회계연도 총수입 · 총지출 실적 (단위: 조원, %, %p)

	2016			2017(잠정)				전년동기대비	
	추경 (A)	1~5월 (누계, B)	진도율 (C=B/A)	예산 (D)	5월 (당월)	1~5월 (누계, E)	진도율 (F=E/D)	증감 (E–B)	진도율 (F–C)
총수입	401.0	179.8	44.8	414.3	32.9	196.0	47.3	16.2	2.5
– 국세수입	232.7	112.7	48.4	242.3	18.5	123.8	51.1	11.2	2.7
– 세외수입	27.2	10.9	40.0	26.4	2.0	12.8	48.5	1.9	8.5
– 기금수입	141.1	56.3	39.9	145.6	12.4	59.4	40.8	3.1	0.9
총지출	398.5	175.4	44.0	400.5	30.7	184.8	46.1	9.4	2.1
– 일반회계	221.7	104.2	47.0	224.4	17.8	107.0	47.7	2.7	0.6
– 특별회계	49.6	22.9	46.1	50.2	4.3	24.3	48.3	1.4	2.2
– 기금	127.3	48.3	37.9	125.9	8.5	49.8	39.5	1.5	1.6
– 세입세출외[1]	–	0.02	–	–	0.00	3.77	–	3.75	–

주: 1) 자치단체 교부금 정산 등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재정동향」 7월호, 2017. 7.

주요 재정지표

재정수지

총수입 증가에 힘입어
5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전년동기 대비 5.5조원 개선

2017년도 5월까지 통합재정수지는 11.3조원 흑자로 전년동기 대비 6.8조원 개선되었으며, 관리재정수지는 7.0조원 적자로, 전년동기 대비 5.5조원 개선

○ 전년동기 대비 통합재정수지 개선의 주요 사유는 총지출 증가(9.4조원)에 비해 총수입이 큰 폭(16.2조원)으로 증가하였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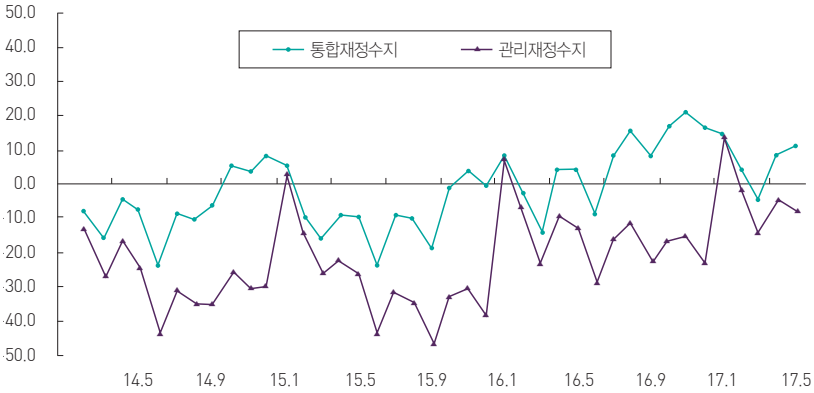
– 통합재정수지 중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전년동기 대비 1.4조원 증가, 관리재정수지는 전년동기 대비 5.5조원 각각 개선

2016/2017회계연도 재정수지 실적 (단위: 조원)

	2016		2017(잠정)			전년동기 대비 증감 (B–A)
	추경	1~5월 (누계, A)	예산	5월 (당월)	1~5월 (누계, B)	
총수입(a)	401.0	179.8	414.3	32.9	196.0	16.2
총지출(b)	398.5	175.4	400.5	30.7	184.8	9.4
통합재정수지(c=a–b)	2.5	4.5	13.7	2.2	11.3	6.8
사회보장성기금수지(d)	41.5	16.9	42.1	4.2	18.3	1.4
관리재정수지(e=c–d)	–39.0	–12.5	–28.3	–2.0	–7.0	5.5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재정동향」 7월호, 2017. 7.

재정수지 추이(누계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재정동향」 7월호, 2017. 7.

국가채무

2017년도 5월말 중앙정부 채무는 630.7조원으로 전월대비 9.4조원 증가하였으며, 2016년말 591.9조원 대비 38.8조원 증가

○ 전월대비 증가의 주된 사유는 국고채권이 크게 증가(36.7조원)하였기 때문이며, 전년대비 증가 사유 역시 국고채권 증가(9.9조원)에 따름

– 총수입 증가 불구, 국고채권이 크게 증가한 주된 사유는 6월 만기도래하는 국채 상환(10.5조원) 등을 위함

※ 국고채 발행은 매달 이루어지나, 국고채 상환은 연중 4회(3,6,9,12월) 이루어지므로 상환이 없는 달에는 국가채무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

2016/2017년도 중앙정부 채무 실적 (단위: 조원)

	2015	2016		2017(잠정)			증감	
	결산 (A)	결산 (B)	전년 (B–A)	예산	4월(C)	5월(D)	전년 (D–B)	전월 (D–C)
중앙정부 채무	556.5	591.9	35.4	646.6	621.3	630.7	38.8	9.4
■ 국채	551.5	587.5	36.0	642.7	617.2	626.6	39.0	9.4
– 국고채권	485.1	516.9	31.8	566.0	543.7	553.6	36.7	9.9
– 국민주택채권	59.3	64.0	4.7	68.5	66.0	65.5	1.6	–0.5
– 외평채권(외화)	7.1	6.7	–0.5	8.3	7.4	7.4	0.8	0.0
■ 차입금	3.3	3.9	0.6	3.7	3.7	3.7	–0.2	–
■ 국고채무부담행위	1.7	0.5	–1.3	0.2	0.4	0.4	–0.1	–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재정동향」 7월호, 2017. 7.

국고채 발행 증가로
5월까지 중앙정부 채무
2016년말 대비 38.8조원 증가

재정입법 동향

· 1 · 2분기 가결된 재정수반법률 현황

· 위원회 계류 주요 재정수반법률

1·2분기 가결된 재정수반법률 현황

2017년 1 · 2분기(1.1.~6.30.) 가결 법률의 추계서 첨부 현황

○ 2017년 1 · 2분기 국회 본회의에서 총 284건의 법률이 가결되었고, 이 중 재정수반법률은 67건(23.6%)

	의결법률	재정수반법률		
		추계서 첨부	미첨부 사유서 등	소계
지출법률	284	29	37	66
조세특례	1	1	0	1
계	285	30	37	67

주: 2분기 의결된 법률은 1건이며, 신규로 통과된 재정수반법률은 없음
자료: 의안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정리

국회법 제66조 및 제79조2에 따라 안건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 비용추계서 첨부

추계서 첨부된 30건의 소관 위원회별 추계액

○ 추계서 첨부된 30건의 5년간 추계액을 소관 위원회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보건복지위원회 46조 2,639억원(8건), 기획재정위원회 6,505억원(1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696억원(6건) 등의 순서임

위원회	추계 법률수	추계액	2018	2019	2020	2021	2022
보건복지위원회	8	462,639	84,295	88,105	92,131	96,646	101,463
기획재정위원회	1	6,505	2,736	1,106	988	883	79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6	1,696	394	332	333	334	303
정무위원회	1	1,283	236	246	256	267	278
국토교통위원회	4	267	97	43	41	42	43
국방위원회	3	137	16	32	33	34	22
안전행정위원회	2	119	22	23	24	25	25
교육문화체육관광위	2	46	36	2	3	3	2
환경노동위원회	1	44	9	9	9	9	9
외교통일위원회	1	2	0.5	0.5	0.6	0.6	0
여성가족위원회	1	2	0.4	0.4	0.5	0.5	0.5
합 계	30	472,742	87,842	89,899	93,819	98,244	102,938

주: 재정수반법률 중 미첨부사유서 제출 법률 및 의결생략이 제외되었고 2017년 및 2023년 이후에 발생하는 재정소요가 있어 실제 소요될 전체 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의안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정리

정혜승 예산분석관(02-788-4647)

위원회 계류 주요 재정수반법률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의원 대표발의)

개정법률안은 훈련 · 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 훈련 시간당 최저임금 시급 지급 (안 제11조)

예비군훈련대원에게 훈련시간에 비례하여 최저임금 지급 (5년간 1조 465억원 소요)

○ 개정안은 국가안보의 확보를 위한 예비군훈련의 이행에 따른 희생비용을 국가가 보전하려는 것임

○ 현행 예비군대원에게 급식비, 교통비 등의 실비변상 지급(1인당, 교통비 7,000원, 급식비 1만 6,000원)

– 외국의 예비군훈련 1일 평균 보상비는 미국 31만원, 이스라엘 17만원, 독일 20만원 등임

○ 개정안이 시행되면, 1일 8시간 훈련을 받는 예비군대원에게 5만 1,760원이 추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

○ 현행(2017년) 369만 5,347명에게 개정안에 따른 훈련 시간당 보상비 6,470원을 지급할 경우, 1,680억원 추가 재정소요

추가 재정소요 내역: 2017년 (단위: 억원)

훈련	인원(명)	훈련시간(시간)	시급(원)	재정소요
기본훈련	1,055,437	8	6,470	546
동미참훈련	984,810	8	〃	510
작계훈련	1,511,858	6	〃	587
소집점검	143,242	4	〃	37
합계	3,695,347	–	–	1,680

자료: 국방부(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17. 6., 국방위원회)

○ 개정안에 최근 5년간 연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7.42%를 반영한 향후 5년간 추가 재정소요는 1조 465억원 추정

추가 재정소요: 2018~2022년 (단위: 억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예비군대원 최저임금 지급	1,805	1,938	2,082	2,237	2,403	10,465

김진태 예산분석관(02–788–374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환경노동위원회 대안)

개정안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도록 함(안 제37조제1항제3호나목)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5년간 3조 4,031억원 소요)

○ 일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인정범위가 공무원과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일반 근로자에 대해서도 통상적 경로 · 방법의 출퇴근 사고에 대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자 함

– 헌법재판소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현행 규정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2016.9.29, 2014 헌바254)

○ 개정안에 따른 연간 출퇴근 재해 인정자 수는 자동차 이외(도보 · 자전거 · 대중교통 등) 사고자 2만 3,826명과 자동차 사고자 7만 420명 등 총 9만 4,246명으로 예상

○ 산재보험급여별 연간 지급단가(2018년 기준 자동차사고)는 요양급여 156만원, 휴업급여 314만원, 장해급여(일시금) 1,442만원, 유족급여(일시금) 1억 104만원 등임

– 자동차사고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향후 보험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급여액의 36%를 회수하는 것으로 전제

○ 개정안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추가재정소요(운영비 포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3조 4,031억원 예상

추가 재정소요: 2018~2022년 (단위: 억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출퇴근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4,568	6,710	7,230	7,613	7,912	34,031

주: 보험회사와의 구상금 청구액을 협의 · 조정하기 위한 '구상금협의조정기구' 운영비(안 제87조의2, 5년간 총 5억원)를 포함한 금액

이진우 예산분석관(02-788-4740)

재정입법 동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은 국가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교체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제1항제9호)

전기버스 · 전기택시 등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교체비용 지원
(5년간 375억원 소요)

○ 전기자동차의 성장잠재력 및 친환경성 등을 고려하여 전기자동차에 대한 배터리 교체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전기자동차산업의 활성화 도모

-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자동차 구입 시 구매자에게 차량 구입가의 약 50%를 보조하고 있으나, 차량 유지 관련 지원은 없는 실정
- 전기자동차는 배터리 수명에 따라 주기적으로 배터리를 교체해 주어야 하는데, 교체 비용으로 신차가격의 약 1/3에 해당하는 금액이 소요되어 사용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

○ 2017년 4월 현재 전국 여객자동차 중 총 2,145대의 전기자동차가 운행 중에 있으며, 향후 5년간 4,554개의 배터리가 교체될 것으로 전망

전국 전기자동차 운행 현황 및 향후 배터리 교체규모 (단위: 대, 개)

구 분	전기버스	전기택시	전기렌터카	합 계
현재 운행중인 전기자동차 차량 수	40 (49)	211	1,894	2,145 (2,154)
향후 5년간 교체대상 배터리 수	49	611	3,894	4,554

주: ( ) 안의 숫자는 사용 중인 배터리의 수

○ 개정안에 따라 국가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는 경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374억 6,300만원 소요 예상

추가 재정소요: 2017~202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교체 지원	1,733	1,043	1,568	13,695	19,425	37,463

유희수 예산분석관(02-788-373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은 저소득층 등에게 정부관리양곡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제30조의2 신설)

저소득층, 무료급식단체 등에게 정부관리양곡 무상 제공 (5년간 1,395억원 소요)

○ 증가되는 정부관리양곡의 재고량을 감소시키고 이에 수반되는 관리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복지지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써 저소득층 등에 대해 쌀을 무상공급하고자 함

○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및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시설 및 무료급식단체를 대상으로 정부관리양곡 할인구매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율은 구매자에 따라 기준가격의 50~90%로 상이

- 2017년 기준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쌀 20kg 구매시 3,500원,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보장시설은 17,510원, 무료급식단체는 6,250원을 구매자가 부담
- 현재 저소득층 등의 정부관리양곡 할인을 위해 지원되는 국가예산의 규모는 연간 약 1,032억원으로 추정

○ 개정안에 따라 저소득층 등에게 연평균 약 7만 5천톤의 정부관리양곡이 무상으로 제공되는 경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1,395억 2,8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추가 재정소요: 2018~2022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저소득층 등에 대한 정부관리양곡의 무상 제공	26,886	27,370	27,890	28,420	28,960	139,528

정혜윤 예산분석관(02-788-3746)

주요 재정이슈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의결
· 치매국가책임제 도입 위해 치매안심센터 설치 · 치매안심병원 확충
· 관광업체 운영자금 융자지원 확대
· 스마트공장 3만개 구축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
· 복지부, 6개 지자체 청년수당 신설에 동의 통보
· 신산업 발전 지원을 위해 정부 주도 공간정보사업 추진
· 2016년도 말 소송충당부채 2조 631억원, 전년 대비 6,170억원 증가
· 2017년 기금평가결과 국회 제출
· 2017년 통합재정사업 평가결과 발표
· 2016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국회 제출
·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확정
· 2017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규모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의결

정부는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여건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11.2조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2017년 6월 7일 국회에 제출

○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일자리 여건개선,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재정 보강 등 4대 분야로 구분

○ 추경의 재원은 2017년 예상초과세수 8.8조원, 전년도 세계잉여금 1.1조원, 기금 여유자금 1.3조원 등 총 11.2조원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표 (단위: 조원)

구분	규모	주요내용
	11.2	
일자리 창출	4.2	– 공공부문 일자리 – 중소기업 청년 창업지원사업, 재기지원 펀드 조성 등 – 스타트업 · 창업 촉진 – 신산업 일자리 창출 – 지역밀착형 일자리
일자리 여건 개선	1.2	–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 여성 일자리 환경 개선 –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	2.3	– 치매 · 의료비 등 부담 경감 – 주거 · 교육 등 생계부담 완화 – 미세먼지 · 안전 · 에너지 절감 투자
지방재정 보강	3.5	– 지방교부세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자료: 기획재정부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의결

국회는 지난 7월 22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친 11조원 규모의 수정안을 의결

○ 정부안(11조 1,869억원) 대비 국회 수정규모는 1,537억원이 감소된 11조 332억원

– 1조 15억원을 순감액(1조 2,519억원 감액, 2,504억원 증액)하고 이 중 7,000억원을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하고 1,575억원은 농특회계 재원 보전에 사용하도록 함

○ 국회 수정 결과, 총수입은 423.1조원으로 본예산 대비 8.8조원, 총지출은 410.1조원으로 본예산 대비 9.6조원 각각 증가

–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본예산 대비 0.8조원 악화된 13.0조원 흑자 전망

주요 재정이슈

–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본예산 대비 0.6조원 악화된 28.9조원 적자 전망

○ 국가채무는 본예산 기준 682.4조원(GDP 대비 40.4%)에 비해 13.2조원 감소한 669.2조원(GDP 대비 39.6%) 전망

– 국회는 감액의 일부(7,000억원)를 국채 상환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정부제출 추경안(39.7%)보다 0.1%p 개선 전망

공무원 신규채용비용(80억원) 등 1.3조원 감액하고, 항구적 가뭄대책 추진(1,077억원) 등 2,504억원 증액

추경에 따른 재정총량 변화 (단위: 조원, %)

	2016	2017		증 감 (B–A)
		본예산(A)	추경(B)	
◇ 총 수 입	401.8	414.3	423.1	8.8
◇ 총 지 출	384.9	400.5	410.1	9.6
■ 통합재정수지	16.9	13.8	13.0	△0.8
(GDP대비)	(1.0)	(0.8)	(0.8)	–
■ 관리재정수지	△22.7	△28.3	△28.9	△0.6
(GDP대비)	(△1.4)	(△1.7)	(△1.7)	–
■ 국가채무	627.1	682.4	669.2	△13.2
(GDP대비)	(38.3)	(40.4)	(39.6)	△0.8

주: 1) 국가채무는 지방정부 순채무 포함
2) '16년 GDP는 한국은행 수정 반영, '17년은 국가재정운용계획('16~'20)상 전망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감액된 1조 2,519억원의 주요 항목은, 공무원 증원에 따른 채용 · 교육 비용(80억원),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6,000억원), 산업은행 출자 (200억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244억원), 각 부처의 R&D 관련 사업 (218억원) 등임

감액사업 주요 내용

분야	주요내용(예시)	감액 금액
공무원 증원	국가시험 시행(인사혁신처) 피복관리 등(경찰청) 기본피복 등(국방부)	△31억원 △32억원 △17억원
4차산업혁명 지원 등을 통한 일자리 확충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산업은행 출자	△6,000억원 △200억원
민간 청년고용지원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244억원 △22억원
R&D사업	개인기초연구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 기술혁신형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	△43억원 △20억원 △19억원

자료: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 증액된 2,504억원은, 항구적 가뭄대책 추진(1,077억원),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450억원),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등 민생 현안 추진(977억원)임

증액사업 주요 내용

분야	주요내용(예시)	증액 금액
항구적 가뭄대책 추진 (1,077억원)	–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지원 – 다목적농촌용수개발 조속한 추진 – 가뭄 상습지(신안 등) 조기 급수 추가 – 아산호–금광 · 마둔지 수계연결 설계비	400억원 216억원 100억원 15억원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 지원 (450억원)	– 올림픽 국내외 홍보 – 평창 문화올림픽 지원 – 도시경관지원	230억원 153억원 36억원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지원 등 (977억원)	–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 장애인활동지원 – 대기개선 추진대책(DPF부착, LPG엔진개조) –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100명)	300억원 204억원 30억원 6억원

자료: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공무원 신규채용비용을 목적예비비로 지출하도록 하는 등 27건의 부대의견 채택

국회는 금번 추경안을 의결하면서 공무원 2,575명의 신규채용 비용을 목적예비비로 지출하되, 중장기 재원소요 및 향후 채용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총 27건의 부대의견 채택

(부대의견 주요 내용)

○ 정부가 제출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공무원 채용 관련 경비는 경찰 1,104명, 군부사관 652명, 생활안전분야 819명(총 2,575명)의 채용에 필요한 소요를 2017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한다. 공무원 추가 채용(2,575명)과 관련된 경비는 근무연한, 퇴직후 연금부담 등을 고려한 중장기 재원소요 계획(인건비, 관련경비, 사회보험료, 연금부담금 등)을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정부는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통과를 전제로 반영된 목적예비비 2,000억원이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대한 노력한다.

○ 정부는 추경편성 요건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다.

○ 정부는 각 부처의 직접일자리 지원사업이 단순 현금성 복지에 그치지 않고 최소한의 성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적합한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평가하여 2017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각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심지헌 예산분석관(02–788–4625)

치매국가책임제 도입 위해 치매안심센터 설치·치매안심병원 확충

치매안심센터 설치,
치매안심병원 확충으로
치매관리체계 조기구축 계획
(추경 2,031억원 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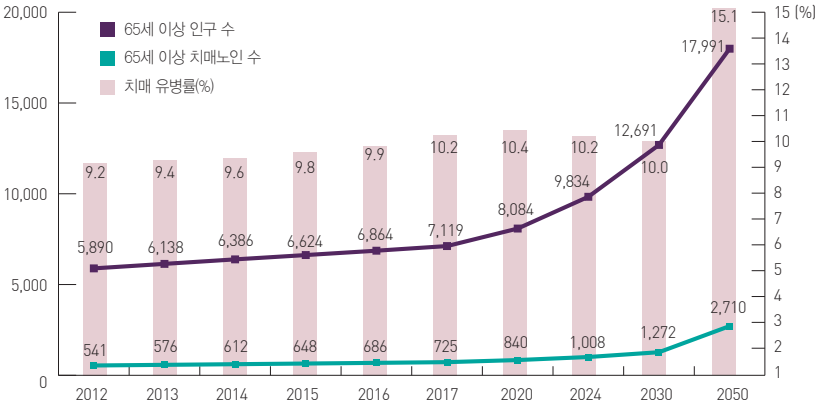
2017년 6월 현재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는 72만명을 넘어섰으며, 치매 유병률은 10%를 초과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 예상

○ 치매는 완치가 되지 않는 질환으로 예방과 조기 발견이 중요한데, 현행 보건소 치매상담센터(252개소)의 인력과 조직으로는 환자가 충분한 치료를 받기에는 한계

– 보건소에서 만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무료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고위험군으로 판명되면 협약병원으로 안내하여 정밀검사 실시

– 치매확진 후 보건소에 치매환자로 등록하는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에 대해서 월 3만원 상한으로 치매 진료비와 약제비 지원

65세 이상 치매환자 추이 (단위 : 천 명, %)



자료: 중앙치매센터 「대한민국 치매 현황 2016」

치매국가책임제 도입을 목적으로 치매안심센터 신규 설치 및 운영, 치매안심병원 확충을 위하여 2,031억원 추경 증액

○ 전국적으로 치매안심센터 205개소를 신규 설치하는 데 1,230억원, 센터당 평균 25명의 전담사례관리사 등 인력 대폭 확충 등을 위해 운영비(1개월) 187억 9,200만원 증액

○ 전국 공립요양병원 45개소에 치매전문병동을 추가로 설치하여, 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집중 치료할 수 있는 치매안심병원을 확충하는 데 604억 8,000만원 증액

○ 치매안심센터 신규자 교육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해 8억 3,500만원 증액

치매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추경 증액 내역 (단위: 개소, %, 백만원)

	개소수 (A)	설치(운영)단가 (B)	보조율 (C)	소요예산 (A×B×C)
치매안심센터 설치	205	750	80	123,000
치매안심센터 운영	205	1,375	80	18,792
치매안심병원 확충	45	1,680	80	60,480
치매안심센터 신규자 교육 및 시스템 구축	–	–	–	835
계	–	–	–	203,107

주: 치매안심센터 운영 소요예산은 (연간)운영단가 1,375백만원을 적용한 후 12로 나누어 1개월치를 구한 것임
자료: 보건복지부 (2017.6.)

지역 특성을 고려한 치매안심센터의 규모 및 기능 차별화 등 구체적 모델 정립 필요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의 효율적 설치 · 운영을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기능(모델) 정립과 구체적 운영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도시 지역은 기설치된 치매지원센터 모델(센터 1개소 10~18명)을 기준으로 이를 확대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이러한 모델의 적용가능성 및 적합성이 낮음

– 농어촌 지역의 경우, 치매안심센터에서 사례관리 등을 담당할 25명의 인력을 구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거지가 원거리에 퍼져 있는 특성상 치매단기쉼터 등 주간보호프로그램실의 운영이 어려움

○ 이러한 지역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신설되는 모든 치매안심센터에 동일한 모델을 적용할 경우 설치 · 운영의 비효율 발생 우려

– 또한 치매안심센터 등 새로 확충되는 치매관리체계의 효율적 구축 · 운영을 위해서는 중앙치매센터를 비롯한 치매관리대책 전달체계의 효과성 · 효율성 확보 필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되는 치매관리 서비스와 치매안심센터 기능의 중복성 검토 및 상호보완 필요

○ 치매안심센터의 주간보호프로그램 기능은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치매 환자에 대한 주 · 야간 단기보호서비스와 중복 소지가 있음

– 처음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기관과의 기능 차별화 없이 치매안심센터를 출발할 경우 추후 비효율성이 나타날 우려가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등급 판정을 받은 치매 환자를 서비스 대상으로 하고, 치매안심센터는 등급외 치매 환자 및 고위험 인지장애자를 서비스 대상으로 함으로써 상호보완이 가능함

김상우 사업평가관(02-788-4685)

관광업체 운영자금 융자지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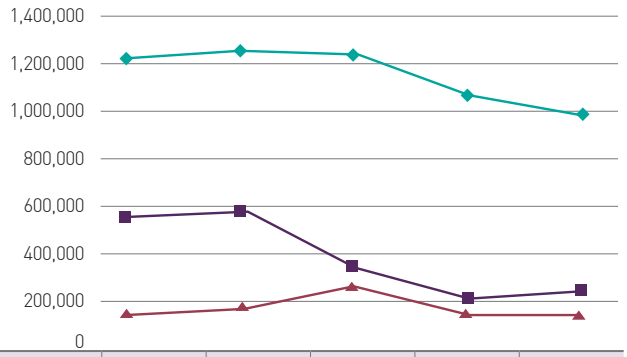
방한 관광시장 위축으로 어려움에 처한 관광업체에 운영자금 특별융자, 2,260억원 지원 (추경 600억원 증액)

최근 3개월간 방한(訪韓) 중국 관광객 수의 지속적 감소 등으로 방한 관광시장 위축이 장기화될 조짐

○ 2017년 5월 외국인 관광객 수는 97만 7,889명으로, 메르스(MERS ·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인해 관광객이 급감했던 2015년 7월 이후 1년 10개월 만에 100만명 이하로 감소했고 전년 동월 대비 34.5% 감소

– 특히 중국관광객 수는 방한상품 판매 금지 조치로 인한 감소가 계속되어 전년 동월 대비 64.1% 감소

2017년 1월~5월 방한외래객 현황



	1월	2월	3월	4월	5월
방한외래객(명)	1,220,695	1,252,080	1,233,640	1,075,899	997,889
중국인 관광객(명)	565,243	590,790	360,782	227,811	253,359
일본인 관광객(명)	154,662	185,032	274,478	165,748	159,379

자료: 한국관광공사

문화체육관광부는 방한 관광시장 위축으로 어려움에 처한 관광업체 지원을 위해 상반기 438개 관광사업체에 2,260억원의 운영자금을 특별융자하기로 결정

○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관광사업체의 시설 확충 · 개보수 자금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7년 당초 계획은 5,500억원(시설자금 4,800억원, 운영자금 700억원)

– 이번 특별융자는 당초 시설자금으로 계획한 자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함

○ 이번 특별융자부터 운영자금 대출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1년 연장(이전: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하고, 중소기업은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1.5%의 금리로 융자 가능(중견기업: 2.25% 적용)

한편, 국회는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시, 운영자금 600억원을 증액하기로 기금운용계획 변경 의결

○ 이는 관광여건 악화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관광사업체에 운영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한 것

관광산업 융자지원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세부내역

구분		2017년도 당초 계획(A)	2017년도 추가 계획(B)	계(A+B)
시설자금	건설	3,900억원 (20억×195개 업체)	–	3,900억원
	개보수	900억원 (73억×120개 업체)	–	900억원
운영자금		700억원 (1.8억×380개 업체)	600억원 (1.8억원×330개 업체)	1,700억원
계		5,500억원	600억원	6,100억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융자지원 확대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소규모 관광업체에 대한 지원 활성화 필요

담보력이 부족한 소규모 관광업체에 대한 융자지원 방안 마련 필요

○ 융자 심사 절차에서 최종 대출규모의 결정은 시중은행이 결정하게 되어 담보능력이 없는 소규모 관광업체의 경우 정부 융자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음

– 시중은행은 통상 130~150%의 담보 제공을 요구하고 있고 무형의 영업권 등은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운영자금 융자선정액은 최대 대출가능액으로 담보력에 따라 은행의 대출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기 때문

○ 담보력이 부족한 소규모 관광업체에도 실질적인 융자지원 활성화 필요

온세현 예산분석관(02-788-4633)

스마트공장 3만개 구축으로 4차 산업 혁명 선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으로 지능형 유연생산시스템을 구축하여 불량률 감소 · 납기단축 등 중소 · 중견기업의 경쟁력 향상

○ 스마트공장이란 설계 · 개발, 제조, 유통 · 물류 등 생산 전체 과정에 디지털 자동화 솔루션이 결합된 선진적 ICT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성, 품질,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지능형 유연생산공장

– 스마트공장은 수준, 분야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구현 가능하며, 기업의 현실에 맞게 단계적으로 공장의 스마트化 추진

4차 산업혁명 가속화에 따라 2025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 목표 (추경 215억원 증액)

○ 2016년까지 민간 재원을 포함하여 1,341억원 투입, 2,805개 중소 · 중견기업에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 스마트공장 구축 완료기업을 대상 조사에서 구축전후 대비 생산성 개선(23%), 불량률 감소(△46%), 원가 절감(△16%), 납기 단축(△34.6%)으로 구축기업의 경쟁력이 향상(2016년 12월 스마트공장추진단 조사 결과)

○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에 1,241억원(추경증액 215억원 포함)을 투입, 2,600개 중소 · 중견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여 누적기준 5,400여개 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달성한다는 목표

스마트공장 구축 예산 규모 및 구축 개수 (단위: 억원, 개)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본예산	추경
스마트공장 구축 예산 규모	정부	80	238	665	823	1,038
	민간	51	94	213	203	203
	소계	131	332	878	1,026	1,241
스마트공장 구축 개수	정부	144	659	1,013	1,670	2,070
	민간	133	295	561	530	530
	소계 (누적)	277 (277)	954 (1,231)	1,574 (2,805)	2,200 (5,005)	2,600 (5,4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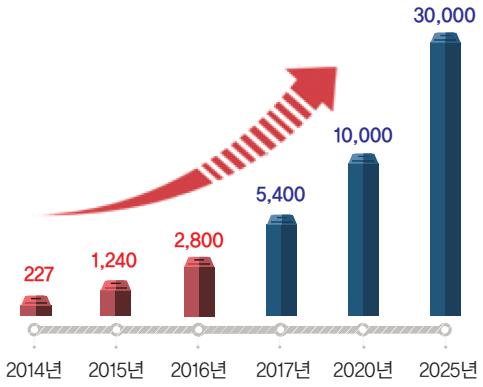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4차 산업혁명 가속화에 따라 급변하는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025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 목표

○ 산업통상자원부는 4차 산업혁명 가속화에 따라 소비자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2017년 4월 스마트공장 보급목표를 상향(2020년까지 1만개 구축 → 2025년까지 3만개 구축)

– 스마트 공장 구축 기업에 대한 인증제도 신설, 협약보증 대출 확대 등을 통해 민간 중심의 자발적 구축 유도

스마트공장 보급실적 및 향후 계획 (단위: 개)



스마트공장 구축으로 발생하는 유휴인력의 재배치 교육 등 활용방안 모색 필요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경쟁력 확보와 유휴인력 활용방안 모색 필요

○ 스마트공장 공급기업들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지원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 필요

–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까지 스마트공장 기반기술 R&D에 총 2,154억원을 투입하여 SW · 컨트롤러 · 로봇 · 센서 분야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데모공장을 활용하여 국제표준 호환성 등을 검증한다는 계획

○ 스마트공장 구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휴인력 재배치를 위한 재교육 필요

–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의 생산자동화 등에 따라 고용인원이 감소하지 않도록 스마트공장 구축 중소 · 중견기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유휴인력의 재배치를 위한 교육 확대 필요

한성진 예산분석관(02-788-4630)

복지부, 6개 지자체 청년수당 신설에 동의 통보

고용노동부, 지자체 청년수당과 유사한 청년고용촉진수당 도입 (추경 681억원 증액)

보건복지부는 지자체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협의 요청한 2017년도 청년수당 사업에 대한 검토 결과, 6개 지자체에 대해 최종 동의 의견 통보

○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의무화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근거하며 중앙과 지자체의 신설 · 변경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국가 전체적인 틀 안에서 중앙과 지방 간 조화로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

○ 서울시, 경기도 등 6개 지자체는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 중에 청년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각종 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자체별로 지원대상자, 소득기준, 급여내용이 상이

○ 보건복지부는 지자체별로 사업내용이 다른 청년수당을 조화롭게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가 최초 제출한 사업내용을 보완하도록 하여 최종 동의 · 통보하고 있으나 사업 추진 이전에 모든 부작용을 방지하기는 어려움

한편, 국회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지자체가 추진하는 각종 청년수당과 유사한 내용의 청년구직촉진수당 681억원을 증액하기로 결정

○ 청년구직촉진수당은 만 15~34세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참여 청년을 대상으로 3개월간 월 30만원의 구직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2017년 추경에서 고용노동부 신규 사업으로 9.5만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681억원이 반영

○ 지자체 청년수당과 유사한 내용의 청년구직촉진수당 신설은 중앙과 지방 간 조화로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 사전 협의를 정한 「사회보장기본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음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각종 청년지원제도의 효과 분석 등을 통해 향후 사업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청년구직촉진수당과 지자체의 각종 청년수당 중복 해소 등 필요

○ 보건복지부는 해당 지자체들에 사업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업결과 분석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 제출하고, 무분별한 현금지급이 되지 않도록 급여 방식을 카드 지급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하였으므로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국회는 추경예산을 의결하면서 "고용노동부는 청년구직촉진수당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사업과의 중복, 지역간 지급금 차별 문서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한다"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음

지자체 청년수당과 고용노동부 청년구직촉진수당의 합리적 조정 필요

지자체 청년수당 지원 사업 현황

	인천시	서울시	경상북도	경기도	대전시	부산시
사업명	청년구직 활동지원	청년수당	청년직업교육 훈련수당	청년구직 지원금	청년취업 희망카드	청년구직 활동비
지자체 접수일	2016.10.7.	2017.1.5.	2017.1.25.	2017.2.2.	2017.3.20.	2017.3.24.
지원 대상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자	서울시 1년 이상 거주 만19~34세 미취업자	경상북도 거주 만19~39세 미취업청년 중 전문교육과정 수료자	경기도 1년 이상 거주 만18~34세 미취업자	대전시 6개월 이상 거주 만18~34세 구직활동 중인 청년	부산시 1년 이상 거주 만19~34세 구직 청년
소득 기준	Ⅰ유형: 중위소득 60% 이하 Ⅱ유형: 청년층 (만18~34세) 소득무관	중위소득 150% 이하	취업성공 패키지 선정기준과 동일	중위소득 80% 이하	중위소득 150% 이하	중위소득 80% 이하
급여 내용	Ⅰ유형: 구직 활동비(월 20만원,3개월) Ⅱ유형: 취업성공수당 (20만원, 1회 지원)	월 50만원 (최대 6개월)	훈련수당 (월 40만원) 위탁교육비 (월 60만원, 3~6개월)	월 50만원 (최대 6개월)	월 30만원 (최대 6개월)	월 20만원 (최대 12개월)
급여 방식	현금급여	카드발급	현금급여	카드발급 (경기청년카드)	카드발급	카드발급 (체크카드)
소요 예산	30억원	150억원	25억원	45억원	108억원	36억원
지원 인원	7,000명	5,000명	450명	1,200명	6,000명	3,000명

자료: 보건복지부

김성은 예산분석관(02-788-4634)

신산업 발전 지원을 위해 정부 주도 공간정보사업 추진

공간정보는 위치, 경로, 시점 등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관한 정보로서 자율주행차, 무인기(드론) 등 신산업 발전의 핵심기반

국토교통부는 지난 4. 4. '제5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13~2017)'의 이행을 위해 총 722개의 공간정보사업에 3,133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2017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확정

○ 전년도 예산액(2,981억원)에 비해 152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미래 유망산업 발전기반으로써 이미 길안내기(내비게이션) 등을 통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공간정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반영

2017년 공간정보사업 예산 현황 (단위: 개, 백만원)

	사업수	예산	사업당 예산	주요 사업
중앙정부	62	209,408	3,378	3차원 공간정보 구축, 국가기준점 관리 등
지방정부	660	103,932	157	항공-VR 구축, 드론영상 통합관리시스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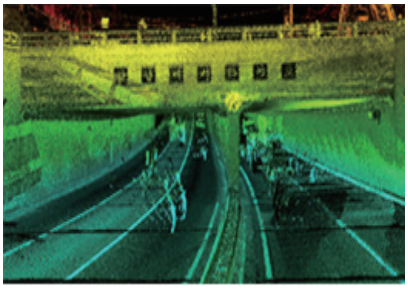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 「2017년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2017.

신산업 발전 지원을 위해 정부는 자율주행을 위한 정밀지도 및 드론을 위한 공간정보 구축 사업 등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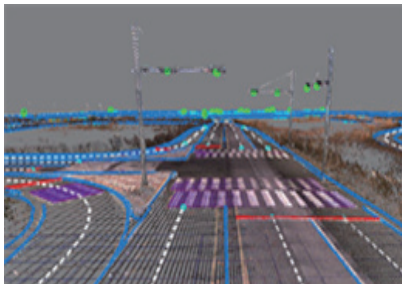
○ 자율주행을 위한 정밀지도는 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고 있으나, 크게 점군 데이터를 주로 활용하는 'ICT 그룹'과 벡터 데이터를 활용하는 '양산차+내비 그룹'으로 양분(기술 · 산업 환경 급변, 점차 융 · 복합 추세)

○ 정부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을 위해 2020년까지 국토지리정보원 주도로 점군 및 벡터 데이터 정밀지도 제작

점군 데이터(위치정보)



벡터(점 · 선 · 면, 위치+속성)



자율주행을 위한 정밀지도 분류

구 분	ICT 그룹	양산차+내비 그룹
자차위치	센서 취득정보 + 점군 데이터	센서 취득정보 + 벡터 데이터
규제정보	센서 취득 (+ 벡터 데이터)	벡터 데이터 + 센서 취득
활용현황	국외: 구글 등 / 국내: 서울대	국외: 양산차 기업 / 국내: 현대차

정부가 세계경제 체계 변화에서 공간정보 관련산업 육성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민간의 참여와 활용을 이끌어 냄으로써 고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제6차 국가공간 정보정책 기본계획 (2018~2022)’ 수립 계획시 지능화 · 초연결 관점을 반영할 계획

○ 각종 수치지형도 및 정사영상 등 15종의 공간정보를 무상 제공하고, 민간 수요 및 활용성이 높은 자료(데이터) 33종을 선정하여 원천 데이터베이스 및 공개 에이피아이(API) 형태로 제공하는 등 산업 활성화에 기여

○ 공간정보 클라우드(Cloud)를 구축하여 민간에서 별도 프로그램과 전산장비 구매 없이 공간정보를 활용한 모바일 앱(App)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 제공

최근 공간정보정책은 수요자 중심 유통 및 활용, 활용 확산, 중복투자 방지 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정부는 지능화 · 초연결 관점에서 공간정보의 근본적 방향 변화를 모색하고 있음

○ 정부는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18~2022)’ 수립을 통해 향후 공간정보정책 방향을 재수립할 계획

- 다만, 주무부처가 ‘3차원 공간정보 구축사업’, ‘공간정보 산업육성’, ‘국가공간정보 창의인재 양성’, ‘실내공간정보 구축사업’, ‘SGIS DB 구축 사업’ 등 재정당국이 예산을 삭감한 사업들을 우선투자사업으로 선정하고 있으므로, 예 · 결산 심사 시 사업별 성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중앙정부 소관 사업들은 국가기준점 관리(156억원), 국가기본도 수정제작(314억원), 국가해양기본도 구축(102억원) 등 대부분 계속사업이므로, 정부는 일자리 창출 등 신산업지원 재정성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신산업지원 공간정보사업’을 별도 프로그램으로 관리하는 방안 검토 필요

안태훈 사업평가관(02-788-4678)

2016년도 말 소송충당부채 2조 631억원, 전년 대비 6,170억원 증가

소송충당부채는 정부 패소시 확정치는 우발적 채무로서 향후 국가재정부담 우려

2016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소송충당부채 규모는 2조 631억원으로 2015년도 1조 4,461억원에서 6,170억원 증가

○ 소송충당부채란 재정상태표일 현재(2016. 12. 31.) 소송사건 중 패소가능성이 매우 높은 소송사건의 소송가액을 재정상태표에 인식하는 것을 의미

– 소송충당부채 규모는 정부 패소에 따른 향후 재정부담 수준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행정이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집행되고 있는지를 반영하는 간접지표로 볼 수 있음

○ 2016년도 말 계류 중인 전체 정부 피고 소송건수(소송충당부채가 설정되지 않은 소송사건도 포함)는 총 4,742건(소송가액 7조 5,458억원)에 달하고 있음

– 패소시 국가 배상금은 배상금 비목(310–02목)에서 지급하고 부족액은 예비비, 이 · 전용 등으로 충당

전체 소송충당부채의 98.6%를 차지하는 주요 5개 부처의 소송충당부채 현황을 보면 과세행정을 담당하는 부처(국세청, 관세청)가 높은 비중을 차지

○ 국세청과 관세청의 2016년도 말 소송충당부채는 1조 6,106억원으로 전체 소송충당부채의 78.1%를 차지하고 있음

○ 국세청, 법무부, 금융위원회는 모두 전년 대비 소송충당부채가 증가한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송충당부채가 전년 대비 82.1% 감소하였음

2016년도 말 소송충당부채 주요 5개 부처 현황 (단위: 백만원, %)

	2015	2016	증가액	증가율
전체 규모	1,446,122	2,063,133	617,011	42.7
주요 5개 부처	1,273,183	2,034,994	761,811	59.8
– 국세청	606,885	1,533,208	926,323	152.6
– 법무부	196,399	233,537	37,138	18.9
– 금융위원회	77,900	137,629	59,729	76.7
– 관세청	94,662	77,388	△17,274	△18.2
– 공정거래위원회	297,337	53,232	△244,105	△82.1

자료: 2016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및 중앙관서별 결산보고서

소송충당부채 규모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 · 검찰청을 비롯한 주요 부처의 소송수행 역량 제고 노력이 필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각 부처의 행정소송 수행을 지휘할 권한이 있음

- 법무부 국가송무과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 검사장이 실제 송무 업무 수행
- 패소 시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소송수행청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 · 감독을 강화, 소송 성과를 제고할 필요

○ 최근 송무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각 부처의 조직 · 인력 관련 대책이 패소율 감소와 같은 실질적인 소송수행 성과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 필요

- 국세청은 세금 불복 소송 패소 금액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울청의 징세법무국을 송무국으로 개편하고, 주요 송무 인력을 조세 전문 변호사 위주로 채용
-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 심결 · 소송 전 과정에서 소송수행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 시행 중

소송충당부채의 적절한 관리 위해, 소송수행 역량 향상 및 신중한 과세 처분 필요

과세행정 관련 소송충당부채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는 신중한 과세처분 필요

○ 2014년도 말 국세청과 관세청의 소송충당부채는 9,303억원으로 총 소송충당부채 2조 494억원의 45.4% 수준이었으나, 2015년에는 48.5%, 2016년에는 78.1%로 증가

○ 법률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세법 조항을 정비하고,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충분히 검토하여 과세처분을 집행하는 등 노력 필요

- 2016년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50억원 이상 고액사건에 대한 내국세 조세심판 인용률(재조사 포함)은 41.7%로 전체 사건 인용률 대비 1.73배(2015년 1.62배)에 달하고 있음

김정환 사업평가관(02-788-4751)

2017년 기금평가 결과 국회 제출

2017년 기금평가 결과,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 제고 필요

기획재정부는 5월 23일 2017년 기금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5월 31일 국가결산보고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

○ 기금평가는 「국가재정법」 제82조에 따라 매년 기금의 존치여부와 사업성과 · 자산운용 실태 등 기금운용실태를 평가하는 제도로써, 기금운용평가와 기금존치평가로 구성

– 2017년에는 고용보험기금 등 38개 기금에 대해 기금운용평가를,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21개 기금에 대해 기금존치평가를 실시

38개 기금의 2016회계연도 자산운용평가 결과, 5개 기금이 탁월 등급을 받는 등 총 평점은 전년대비 소폭 상승(71.1→72.6점)

○ 공무원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 '탁월' 등급을 받은 반면, '미흡' 또는 '아주미흡' 등급은 없음

2016회계연도 자산운용평가 결과

평가등급 (기금 수)	기 금
탁월	공무원연금, 사립 · 교직원연금 등 5개
우수	근로복지진흥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등 12개
양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기술보증기금, 국민연금기금 등 19개
보통	고용보험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2개
미흡 · 아주미흡	없음

자료: 기획재정부

2017년 기금존치평가 결과, 21개 기금 모두 존치가 타당한 것으로 평가

○ 다만, 국민연금기금(2016년 평잔 516조원)은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과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

– 기금운용본부가 공단 내부의 한 부서이며, 본부장 연임결정 권한이 공단 이사장에게 있어서 독립성에 한계

– 국민연금과 유사한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CalPERS)은 이사 임기의 장기화,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전문성 강화 노력

사업의 적정성이 낮은 17개 사업 및 재원의 적정성이 낮은 15개 기금에 대해 제도개선 등 권고

○ 공예관광산업육성(관광진흥개발기금), 복지시설운영사업(군인복지기금) 등 14개 사업에 개선 권고, 사물인터넷 활성화기반조성(방송통신발전기금)과 사물인터넷 융합기술개발(정보통신진흥기금) 등 3개 사업에 통합 권고

○ 자체수입 비중이 낮은 문화재보호기금 등 4개 기금에 대해 자체수입 확보, 사업축소 등을 권고하고, 자산규모가 과다한 국제교류기금 등 10개 기금에 대해서는 부담금 요율 조정 및 공자기금 예탁 권고

2017 기금존치평가 결과: 재원구조 적정성

재원의 적정성 판단 기준	기금명	개선 권고
자체수입 비중이 낮은 기금	남북협력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문화재보호기금, 언론진흥기금 등 4개	자체수입 확보, 사업축소, 차관방식 개선 등
자산규모가 과다한 기금	국제교류기금, 수산발전기금, 원자력기금(연구개발 계정), 전력산업기반기금, 주택도시기금, 군인복지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지관리기금, 보훈기금, 영화발전기금 등 10개	부담금 요율 조정, 공자기금 예탁 등
자산 대비 융자규모가 과다한 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지관리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수산발전기금 등 4개	이차보전으로 전환 등

기금평가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시 활용 예정

○ 자산운용평가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여, 상 · 하위 1/3 기금의 기금운영비 증액 · 삭감 예정

○ 기금존치평가 결과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등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시 참고자료로 활용

기금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2017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시 활용 계획

유항재 사업평가관(02-788-4672)

2017년 통합재정사업평가 결과 발표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지역발전위원회는 5월 22일 2017년 통합재정사업평가 결과를 최종 확정

○ 통합재정사업평가는 기획재정부가 과거 지적된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2016년부터 실시하는 성과평가 제도
- 부처별 자체평가와 평가 상위기관(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지역발전위원회)의 메타평가로 구성

부처별 자체평가 결과, 총 1조 1,940억원의 지출구조조정 계획 마련

'미흡' 등급 사업 수의 비중(17.6%)과 지출구조조정 규모 비중(1.03%)이 2016년 평가대비 모두 하락

○ 50개 부처가 총 1,415개 사업을 평가하여 우수 등급 238개(16.8%), 보통 등급 928개(16.8%), 미흡 등급 249개(17.6%) 선정
- 미흡 등급 사업 수의 비중이 2016년 21.4%에서 다소 하락

○ 기획재정부는 미흡 또는 보통 등급 사업을 중심으로 253개 사업에 대해 1조 1,940억원의 지출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하고, 지출구조조정이 곤란한 66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관리 개선대책을 제시
- 총예산 대비 지출구조조정 규모의 비중은 1.03%로 2016년 1.09% 대비 다소 하락

메타평가 결과 모든 부처가 통합재정사업 평가지침을 준수한 것으로 평가

○ 분야별 평가결과에 따라 분야별 우수 및 미흡부처를 선정

메타평가 결과 우수 및 미흡 부처

분야(부처 수)	우수	미흡
일반재정(50개)	문화재청, 통계청, 특허청, 인사혁신처,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보훈처
R&D(18개)	해양수산부	기상청
지역사업(15개)	교육부	중소기업청

자료: 기획재정부

통합재정사업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보완 검토 사항

○ 평가등급 부여 및 부처별 지출구조조정 규모 결정 과정에서 평가 관대화 경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메타평가기관의 지속적 관리가 요구됨

○ 각 부처가 지출구조조정 범위 내에서 우수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기획재정부는 이를 예산안 편성 시 반영함으로써 평가 환류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유항재 사업평가관(02-788-4672)

2016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국회 제출

기획재정부는 5월 31일 2016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국회에 제출

○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담금관리기본법」 제7조에 따라 각 부처의 부담금운용보고서를 기초로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

– 부담금 신설 · 폐지 현황, 부과 · 징수 실적, 사용내역 등 부담금 관련 제반 정보를 수록

2016년도 부담금의 수는 총 90개로 전년 대비 4개 감소하였으나, 징수규모는 19.7조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

○ 한강수계 총량초과부과금 등 5개 부담금이 과징금으로 전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이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에서 분리 신설

○ 징수액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50개 부담금에서 전년 대비 총 1조 3,983억원 증가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 등 32개 부담금에서 총 8,353억원 감소

– 한편, 8개 부담금이 징수 실적이 없는 가운데,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수익자부담금 등 6개 부담금은 부과대상이 없거나 하위법령 미비(광물수입 · 판매부담금)로 징수실적이 없어 제도 정비를 검토할 필요

징수 실적이 없는 부담금에 대한 제도개선과, 중앙–지방 간 부담금 귀속 불균현 현상 등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2016년 징수한 부담금 중 17.0조원(86.2%)은 중앙정부의 기금 및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되었고, 지방자치단체가 2.0조원(10.2%), 공공기관 등이 0.7조원(3.5%) 사용

○ 지방자치단체가 부담금의 실질적 부과 및 징수주체인 점을 고려하면 중앙정부 –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 귀속 불균형 현상은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여지가 있음

귀속주체별 부담금 귀속내역 (단위: 억원,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합 계
	기금	특별회계	광역	기초		
금 액	137,296	32,340	11,380	8,710	6,980	196,706
(비 중)	(69.8)	(16.4)	(5.8)	(4.4)	(3.5)	(100.0)

자료: 기획재정부

유항재 사업평가관(02–788–4672)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확정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예산 편성에
공공기관 경영실적 결과를
반영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

기획재정부는 119개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2016년도 경영실적평가를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17년 6월 16일에 심의 · 의결

○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 직원 성과급 지급, 차년도 예산 반영 규모가 달라지며, 실적부진 기관의 기관장 · 상임이사는 인사조치를 받는 등 공공기관 운영에 영향

- (성과급 지급) 범주별(경영관리, 주요사업) 등급이 '보통'(C) 이상인 114개 기관에 대해 경영평가 성과급을 등급별 · 유형별로 차등 지급
- (인사 조치) 실적부진 기관의 기관장 · 상임이사에 대해 경고 조치
- (경영개선 점검) 기획재정부 및 주무부처는 종합등급 '미흡'(D) 이하를 받은 17개 기관의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사항을 점검할 예정

○ 119개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2016년도 경영실적평가 결과는 종합등급 A 16개, B 48개, C 38개, D 13개, E 4개

- 종합등급 A 기관은 공기업 4개, 준정부기관 12개이며, 실적부진 기관의 임원 24명 경고 조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등급이 전년에 비해 우수기관이 4개 감소하고 양호 기관은 2개 증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연도별 등급 분포 (단위: 개, ( )는 %)

구 분	탁월(S)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미흡(E)	계
2012년	–	16(14.4)	40(36.0)	39(35.1)	9(8.1)	7(6.3)	111
2013년	–	2(1.7)	39(33.3)	46(39.3)	19(16.2)	11(9.4)	117
2014년	–	15(12.9)	51(44.0)	35(30.2)	9(7.8)	6(5.1)	116
2015년	–	20(17.2)	53(45.7)	30(25.9)	9(7.8)	4(3.4)	116
2016년	–	16(13.4)	48(40.4)	38(31.9)	13(10.9)	4(3.4)	119

자료: 기획재정부 (2017.6.)

○ 기획재정부는 2016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차년도 예산 반영 등 예산상 조치를 강화할 예정

- 종합등급 '미흡'(D) 이하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도 경상경비 조정 등 공공기관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
- 구체적인 사항은 「2018년도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반영 예정

2016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 (공기업)

등 급	종 합	경영관리	주요사업
A (우수)	한국관광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조폐공사 (4)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서부발전㈜ (3)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관광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6)
B (양호)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15)	여수광양항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관광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13)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9)
C (보통)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5)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공항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마사회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10)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12)
D (미흡)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5)	울산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2)	부산항만공사 한국석유공사 (2)
E (아주 미흡)	대한석탄공사 (1)	대한석탄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	대한석탄공사 (1)

※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는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2017.6.16.) 참조

30개 공기업 중 한국관광공사 등 4개 기업이 A(우수) 등급, 대한석탄공사 등 6개 기업이 D(미흡) 등급 이하

이동엽 사업평가관(02-788-4836)

2017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규모

2017년 당초예산 기준,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수입은 175.8조원, 통합재정지출은 190.2조원으로 재정수지는 14.4조원 적자 예상

○ 지방세수여건 개선으로 자체수입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통합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6.3% 증가

– 자체수입이 94.4조원으로 전년 대비 8.1%(7.1조원) 증가하고, 의존수입은 77.8조원으로 전년 대비 3.7%(2.8조원) 증가 예상

○ 통합재정지출은 사회복지 · 보건 분야와 인력운영비 등의 높은 증가로 전년 대비 5.7% 증가 예상

– 사회복지 · 보건 분야가 52.3조원으로 전년 대비 5.5%(2.7조원), 인력운영비 등 기타(기본경비 포함)에서 32.9조원으로 전년 대비 12.3%(3.6조원) 증가 예상

2017년 통합재정수지는 14.4조원 적자가 예상되나, 순세계잉여금 19.2조원 포함시 4.8조원 흑자 예상

○ 통합재정수입에서 통합재정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14.4조원 적자이나 순세계잉여금 19.2조원을 포함할 경우 4.8조원 흑자 예상

2017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현황

(단위: 조원, %)

			2015	2016(A)	2017(B)	증감	
						B–A	(B–A)/A
통합재정수입	자체수입	지방세	59.5	64.8	71.2	6.4	9.9
		세외수입	20.8	22.5	23.2	0.7	3.1
		소계	80.3	87.3	94.4	7.1	8.1
	의존수입	지방교부세	31.6	32.0	33.7	1.7	5.3
		보조금	41.8	43.0	44.1	1.1	2.6
		소계	73.4	75.0	77.8	2.8	3.7
	융자회수 등		3.3	3.1	3.6	0.5	16.1
	합계		157.0	165.4	175.8	10.4	6.3
통합재정지출	사회복지 · 보건		46.8	49.6	52.3	2.7	5.5
	SOC		25.5	27.4	28.5	1.1	3.8
	환경보호		16.7	17.9	18.7	0.8	4.5
	농림해양수산		11.6	11.9	12.5	0.6	5.0
	일반공공행정		10.5	11.4	10.4	–1.0	–8.8
	교육		10.1	10.7	11.7	1.0	9.3
	문화 및 관광		8.1	9.0	9.7	0.7	7.8
	과학기술 · 예비비		4.0	4.9	5.3	0.4	8.6
	산업중소기업		4.1	4.5	4.9	0.4	8.9
	공공질서 및 안전		2.9	3.2	3.2	0.0	0.0
	인력운영비 등 기타		27.8	29.3	32.9	3.6	12.3
	합계		168.1	179.9	190.2	10.3	5.7

주: 각 연도 당초예산 기준

자료: 행정자치부(2017.4.),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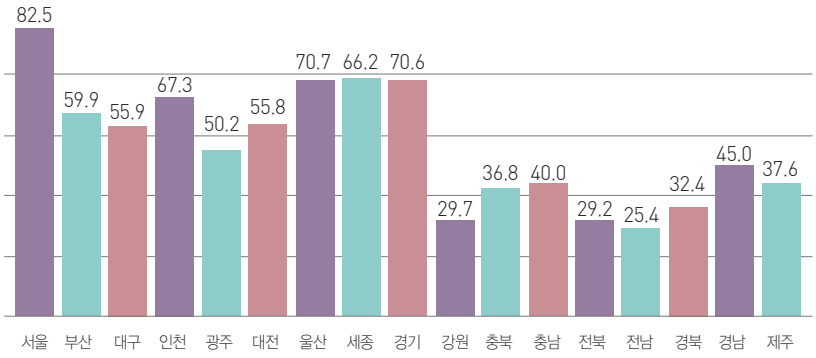
2017년 당초예산 기준 전국 평균 통합재정자립도는 2016년 53.1% 대비 1.1%p 개선된 54.2%이며, 243개 지자체 중 통합재정자립도가 50%를 넘지 못하는 곳이 212곳(87.2%)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합한 통합재정자립도는 2015년 51.7%, 2016년 53.1%, 2017년 54.2%로 최근 3개년 연속 개선됨

– 전국 17개 시도별로 통합재정자립도 70% 이상인 곳은 서울(82.5%), 울산(70.7%), 경기(70.6%) 세 곳이며, 30% 미만인 곳은 전남(25.4%), 전북(29.2%), 강원(29.7%) 등 세 곳으로 나타남

전국 평균 통합재정자립도 3년 연속 개선 불구, 시도별 편차는 여전히 크게 나타남

2017년 시도별 통합재정자립도



김경수 예산분석관(02-788-4643)

외국의 재정동향

- 총괄
- 독일
- 영국
- 프랑스
- 스웨덴
- 이탈리아

총괄

EU 회원국들은 1997년 안정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 이하 SGP)에 따라 매년 4월 말 안정화 계획을 EU 집행위원회(Commission) 등에 제출

○ 각 회원국은 당해 연도 및 향후 3년 동안 재정수지와 국가부채에 대한 중기재정 목표(Medium Term Objective)을 설정

- 1997년 SGP의 기준 설정: 일반정부 재정적자(GDP 대비)가 3% 이내, 국가부채(GDP 대비) 60% 이내
- 2011년 SGP 개정(Six Pack): 국가부채(GDP 대비)가 60%를 초과할 경우 과거 3년 연평균 초과분의 1/20을 감축하는 과다적자시정조치(EDP: Excessive Deficit Procedure) 시행
- 2012년 신재정협약(Fiscal Compact): 구조적 재정적자를 GDP의 0.5% 이내로 제한

EU 집행위원회는 올해 4월에 제출한 2017년 EU 각국의 안정화 계획이 SGP 기준을 준수할 것인지를 평가

○ 독일과 스웨덴은 경제호황과 자국 재정준칙 도입 등으로 인해 SGP 기준을 준수하였고 중기적으로 재정지속가능성을 유지할 것으로 평가

○ 영국과 프랑스는 재정지출 감소 노력을 통해 2016년 일반정부 재정적자(GDP 대비)를 SGP의 기준에 맞추었으나, 복지지출 증가 등으로 중기 재정위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

※ 영국은 EU탈퇴 결정으로 2018년까지만 안정화계획을 제출 예정

○ 이탈리아는 지속되는 경제불황으로 2016년 국가채무 감축이 지연되고, 2017~2018년 부가가치세 인상 철회로 중기 국가채무 감축계획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평가

독일과 스웨덴은 안정화 계획이 양호, 영국과 프랑스는 복지지출 개혁 필요, 이탈리아는 국가채무 감축계획 달성 불가능

EU 주요국의 경제 · 재정 전망 (단위: %)

	연도	독일	영국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
실질 GDP 증가율	2016	1.9	1.8	1.2	3.3	0.9
	2020	1.5	1.9	1.7	2.5	1.1
일반정부 재정수지[1]	2016	0.8	△2.7	△3.4	0.9	△2.4
	2020	0.5	△0.9	△1.3	2.1	0.0
국가부채[1]	2016	68.3	88.0	96.0	41.6	132.6
	2020	59.8	84.8	93.1	31.4	125.7

주: 1) GDP 대비 비율임

자료: EC, 각국의 2017년 안정화 프로그램 평가보고서 토대로 재구성

김대철 재정정책분석과장(02-788-3777)

독일

내수 진작책에 의한 경제성장과 자국의 채무제한준칙 법제화 등에 따라 중기 재정건전성 제고

(2016년 실적 평가) 독일은 실질경제성장률이(1.9%)이 잠재성장률(1.8%)을 초과하는 경제호황으로 일반정부 재정수지가 흑자를 기록하여 SGP 기준을 준수

- 실질경제성장률은 소비와 건설투자 등 내수 진작으로 2015년 1.7%에 이어 2016년 1.9%로 전년대비 0.2%p 상승
- 2016년 일반정부 재정수지(GDP 대비)는 0.8% 흑자로 SGP 기준(GDP 대비 △3% 이하)을 준수, 2016년 구조적 재정수지(GDP 대비)도 0.8% 흑자로 EU 신재정협약의 기준(GDP 대비 △0.5% 이하)을 준수
- 이에 따라 국가부채(GDP 대비)도 2016년 68.3%로 전년대비 2.9%p 하락하여 EU의 과다적자시정조치(EDP) 기준을 준수

(2017년 계획 평가) 독일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내수 진작책에 따른 경제성장으로 구조적 재정수지가 0.2~0.4% 흑자로 전망되어 중기 재정위험이 하락

-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현저한 임금상승과 난민을 위한 이전지출 증가 등의 내수 진작책으로 2017년 1.4%, 2018년 1.6%로 전망되어 일반정부 재정수지(GDP 대비)는 2017년 0.5% 흑자, 2018년 0.3%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EU 집행위원회는 채무제한준칙(2016년부터 구조적 재정수지가 0.35% 적자 이내로 유지) 법제화와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지출검토(spending reviews) 제도 도입을 통한 재정건전화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
- 국가부채(GDP 대비)는 재정정책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68.3%(2016년)에서 57%(2021년)로 꾸준히 하락하여 SGP 기준(GDP 대비 60% 이하)을 조기에 준수 예정

독일의 경제 · 재정 전망 (단위: %)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실질 GDP 증가율	1.9	1.4	1.6	1.5	1.5	1.5
일반정부 재정수지[1)]	0.8	0.5	0.3	0.3	0.5	0.5
구조적 재정수지[1)]	0.8	0.5	0.2	0.2	0.4	0.4
국가부채[1)]	68.3	66.3	64.0	61.8	59.8	57.0

주: 1) GDP 대비 비율임

자료: EC, Assessment of the 2017 stability programme for Germany, 2017.

신동진 경제분석관(02-788-3734)

영국

(2016년 실적 평가) 영국은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2016년 일반정부 재정적자를 SGP의 기준(GDP 대비 3.0%) 미만인 2.7%로 개선

○ 2016년 실질경제성장률은 1.8%로 전년(2.2%)에 비해 0.4%p 감소하였는데, 이는 EU 탈퇴 결정 이후 경제의 불확실성 확산과 영국 파운드화 평가절하로 총투자(3.4 → 0.5%)가 둔화되고 순수출(0.0 → △0.4%)이 감소된데 주로 기인

○ 재정적자가 전년에 비해 개선된 것은 재정수입 증가(GDP 대비 36.0→36.4%)보다 재정지출의 감소(39.9 → 39.1%)에 주로 기인

(2017년 계획 평가) EU 집행위원회는 영국이 재정위험에 도달할 가능성은 단기적으로 낮으나 중장기적으로 고위험 수준인 것으로 평가

최근 영국의 재정건전화 노력은 바람직한 수준이나 EU 탈퇴, 물가상승, 인구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 등 재정위험은 상존

○ EU 탈퇴의 본격화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하락(2.0 → 1.9%)하는 가운데, 영국 정부는 지속적인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일반정부 재정적자(GDP 대비)와 구조적 재정적자(GDP 대비)를 각각 2017년 2.8%, 3.2%에서 2020년 0.9%, 0.9%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계획

– 이에 따라 국가부채(GDP 대비)가 2017년 87.7%에서 2020년 84.8%로 감소할 전망

○ EU 집행위원회는 EU 탈퇴, 물가상승에 따른 이자지출 증가, 저임금 근로자 증가로 인한 개인소득세 둔화 등 단기적 위험 요인이 있으나, 높은 수준의 국가채무와 인구고령화에 따른 연금과 의료비 증가 등으로 중장기 재정위험이 더 심각한 것으로 평가

영국의 경제 · 재정 전망 (단위: %)

	2016	2017	2018	2019	2020
실질 GDP 증가율	1.8	2.0	1.6	1.7	1.9
일반정부 재정수지[1]	△2.7	△2.8	△1.9	△1.1	△0.9
구조적 재정수지[1]	△2.9	△3.2	△2.1	△1.1	△0.9
국가부채[1]	88.0	87.7	87.7	86.5	84.8

주: 1) GDP 대비 비율임

자료: EC, Assessment of the 2016–17 convergence programme for the United Kingdom, 2017.

조은영 경제분석관(02–788–4841)

프랑스

(2016년 실적 평가) 프랑스는 유럽 주요국들에 비해 미약한 경제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출 감소 노력으로 3.4%의 일반정부 재정적자(GDP 대비)를 기록하여 EU의 과다적자시정조치(EDP) 기준(3.4%) 준수

○ 국내수요는 전년대비 1.8%로 증가하였으나, 순수출이 전년대비 0.8% 감소함으로써 2016년 경제성장률이 1.2%에 그침

○ 프랑스 정부는 저금리에 따른 이자지출 등 재정지출 감소(전년대비 1.1%)로 2016년 일반정부 재정적자(GDP 대비)가 3.4%를 기록함에 따라 EU의 과다적자시정조치 기준(3.4%) 준수

– EU 집행위원회는 2009년부터 프랑스에 대해 과다적자시정조치를 시행

중기 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금 등 복지지출 개혁 필요

(2017년 계획 평가) 프랑스 정부는 재정지출 감축 등을 통해 2017년 이후에도 EDP의 기준을 계속 준수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EU 집행위원회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평가

○ 프랑스 정부는 2015~2017년 동안 주정부 지출 등 405억 유로(GDP의 1.8%)의 재정지출 감소를 통해 일반정부 재정적자(GDP 대비)를 2017년 2.8%에서 2020년 1.3%까지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

– EU 집행위원회는 이런 지출감축 방안이 인구고령화와 실업 등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를 상쇄하지 못하므로 2017년 3.0%, 2018년 3.2%의 재정적자를 예상하고 프랑스 정부의 중기 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금 등 사회복지지출 개혁이 필요하다고 평가

– 따라서 프랑스 정부는 국가부채(GDP 대비)가 2017년 96%를 정점으로 2020년에 93.1%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계획한 반면, EU 집행위원회는 2018년 96.7%까지 증가한 뒤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

프랑스의 경제 · 재정 전망 (단위: %)

	2016	2017	2018	2019	2020
실질 GDP 증가율	1.2	1.5	1.5	1.6	1.7
일반정부 재정수지[1]	△3.4	△2.8	△2.3	△1.6	△1.3
구조적 재정수지[1]	△2.5	△2.1	△1.7	△1.3	△1.2
국가부채[1]	96.0	96.0	95.9	94.7	93.1

주: 1) GDP 대비 비율임

자료: EC, Assessment of the 2017 stability programme for France, 2017.

김상미 경제분석관(02-788-4660)

스웨덴

(2016년 실적 평가) 스웨덴은 수입 증가와 자국 재정준칙 도입으로 SGP의 기준을 준수

○ 2016년 일반정부 재정수지(GDP 대비)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 소득세 수입 증가 등으로 0.9% 흑자로 전년 대비 0.7%p 증가

○ 2016년 일반정부 재정수지(GDP 대비)와 국가부채(GDP 대비)는 각각 0.9%와 41.6%로 SGP 기준(△3.0%, 60.0%)보다 양호한 수준

– 스웨덴은 1997년 지출상한제도(중앙정부지출과 연금지출 상한 설정)와 2000년 구조적 재정수지준칙(구조적 재정수지 목표를 GDP 대비 1%(최근 0.33%로 조정)로 설정) 도입을 통해 재정을 총량적으로 관리

자국 재정준칙을 통한 안정화 노력 등으로 재정지속가능성 유지

(2017년 계획 평가) 스웨덴은 난민에 대한 일시적 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2% 대의 실질경제성장률)과 자국 재정준칙을 통한 안정화 노력으로 인해 재정지속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 재정수지는 난민에 대한 일시적 지출 증가 등(GDP 대비 0.55%)으로 2017년 흑자가 감소하였으나, 2017년 이후 난민에 대한 지출 감소로 흑자가 증가

– 일반정부 재정수지(GDP 대비) 및 구조적 재정수지(GDP 대비)는 2017년 각각 0.3% 흑자, 0.4% 흑자로 감소한 이후 2020년 2.1% 흑자와 2.3% 흑자로 증가

○ EU 집행위원회는 스웨덴의 재정지속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 국가부채(GDP 대비)가 2017년 39.5%에서 2020년 31.4%로 감소하여 SGP 기준을 준수

– 단, 난민에 대한 지출 증가는 일시적으로 2017년 구조적 재정수지를 악화시킬 것으로 평가

스웨덴의 경제 · 재정 전망 (단위: %)

	2016	2017	2018	2019	2020
실질 GDP 증가율	3.3	2.6	2.1	2.0	2.5
일반정부 재정수지[1)]	0.9	0.3	0.6	1.4	2.1
구조적 재정수지[1)]	0.8	0.4	0.7	1.7	2.3
국가부채[1)]	41.6	39.5	37.3	34.7	31.4

주: 1) GDP 대비 비율임

자료: EC, Assessment of the 2017 convergence programme for Sweden, 2017.

차병섭 경제분석관(02-788-3734)

이탈리아

향후 경제회복에 따라
중기 재정지표 개선이 예상되나
부가가치세 인상 철회로
재정수입 감소 우려

(2016년 실적 평가) 이탈리아는 2014년에 끝날 것으로 예상되었던 경제 불황이 지속됨에 따라 국가채무 감축계획이 지연

○ 국내 수요는 유연한 통화정책과 세제유인에 따른 투자 증가로 회복되고 있으나 세계경제 회복 지연에 따른 수출과 수입 감소에 따라 경기 불황 지속

○ 국가부채는 2011~2015년 동안 기초재정수지 개선(연간 △1.6%p씩 기여)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GDP 대비 3.3%p씩 증가되었는데, 이는 높은 이자지출, 낮은 물가상승률, 마이너스 실질성장률에 의해 기존 채무의 GDP 비율이 점점 커지는 눈덩이 효과(snowball effect, 연평균 4.0%p)에 주로 기인

(2017년 계획 평가)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로 중기 재정지표들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2017~2018년 부가가치세 인상이 철회됨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우려

○ 2017~2020년 실질GDP성장률은 세계경제 회복과 명목실효환율 인상에 따라 수출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함으로써 이전보다 높은 1.1% 내외로 전망

○ 이탈리아 정부는 이런 경제회복 전망에 따라 2018년 일반정부 재정적자가 GDP의 1.2%를 달성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EU 집행위원회에서는 부가가치세 인상 철회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0.9%)로 동 적자가 GDP의 2.2%에 머물 것으로 예상

- 2016년 안정화프로그램에 따라 2016년 22%인 부가가치세율을 2017년 24%, 2018년 25%로 인상할 예정이었으나 철회

이탈리아의 경제 · 재정 전망 (단위: %)

	2016	2017	2018	2019	2020
실질 GDP 증가율	0.9	1.1	1.1	1.0	1.1
일반정부 재정수지[1)]	△2.4	△2.1	△1.2	△0.2	0.0
구조적 재정수지[1)]	△1.7	△2.0	△1.2	△0.3	△0.3
국가부채[1)]	132.6	132.5	131.0	128.2	125.7

주: 1) GDP 대비 비율임

자료: EC, Assessment of the 2017 stability programme for Italy, 2017.

이강구 경제분석관(02-788-4663)

nabo Fiscal Trends & Issues

재정동향 & 이슈

2017년 여름 통권 제2호

발행일 2017년 7월 26일
발행인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
편 집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02 · 2070 · 3114)
제 작 광진문화사(02 · 2278 · 6746)

© 국회예산정책처, 2017